

 광전도시공사	G-브리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주관 부서	미래전략실	발간 일자	2026. 7. 21.(화)

기초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지방공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

손 경 도

<목 차>

1.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기조	2
2.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3
3. 기초 지방공사 안전환경평가 결과 분석	4
4. 기초 지방공사 안전보건 개선 방향	5

◆ 주요 내용 ◆

-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기조
 - 참여/예방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
 - 불성실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의무화
 - 안전보건 공시제 의무적 확대 도입
-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CEO의 책임 법제화 및 해임요구 근거 신설
 - 경영평가를 통한 안전경영 책임 확립
- 기초 지방공기업 안전환경평가 결과 분석
 -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실행 및 근로자 참여 중심 위험성평가 필요
 - 안전보건 전담부서 권한 강화
- 정책적 시사점(개선 방향)
 - 실행 및 근로자 참여 중심 위험성평가 필요
 - 안전보건 전담부서 권한 강화
 - 원/하청 상생 안전 보증
 - 스마트 안전 연동형 인프라 구축
 - 실질 안전보건 예산의 강제 분리 및 절차서 제정
 - 책임경영과 안전문화의 조화

1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기초

○ 지시·감독에서 참여·예방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 사업주(규제기관)의 일방적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사업장)가 직접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¹⁾ 0.29‰₀₀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본격화

✓ 주요변경 사항

- ① 위험성평가, 모든 사업장의 ‘필수 기본 의무’로 정착
- ② AI·웨어러블 등 스마트 안전장비, 법적 안전조치로 인정
- ③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소규모 사업장 감독 본격화
- ④ 보건 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 규정 대폭 강화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본격화... ‘결과중심’ 법체계로 전환

○ 불성실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의무화

- 그간 벌칙 조항이 없어 형식적 운영에 그치던 위험성평가 제도에 강력한 행정 질서벌(과태료)을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 의무화

✓ 위험성평가 미시행에 대한 처벌 기준

-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핵심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② 근로자 참여 미보장, 참여 요구에 기피, 평가결과 및 대책 실시간 공자·공유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③ 평가 결과를 보존 및 기록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 연간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함,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안전보건 공시제의 의무적 확대 도입

-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매년 대외 공시해야 하며,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 공시 항목

-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
-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직영, 도급, 하청, 건설 발주 모두 포함)
- ③ 전년도 투자 실적과 당해 연도 활동 계획, 재발 방지 이행 실태

2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2026. 1. 12.)

-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 안전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
-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한 규정 구체화
- 위험성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 명확화, 평가 및 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

○ 최고경영자의 책임 법제화와 해임요구 근거 신설

-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

○ 경영평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경각심 강화, 안전경영 책임 확립

-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 부여
- ‘안전활동 수준 평가’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 강화

3

기초 지방공사 안전 환경 평가 결과 분석

- 기초 지방공사가 기초 지방공단, 자치구 공단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
-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4년도 실적) ‘안전 및 환경’ 평가 결과
 - 전체 지방공기업 종합 평점 평균 82.02점, 전년 대비 2.76점 하락
 - 기초 지방공사 평점 평균 76.47점, 전년 대비 9.27점 하락

✓ ‘안전 및 환경’ 분야 경영평가 유형별 평균 점수표

실적 연도	평점 평균	도시 철도	도시 개발	특정 공사·공단		관광 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 공사·공단		광역 상수도	
				광역	기초		광역	시·군		자치구	광역		기초
								공사	공단				
2024	82.02	87.42	88.29	89.90	80.91	88.09	86.18	76.47	79.07	79.24	91.17	84.35	84.81
2023	84.78	88.95	84.26	86.91	89.39	91.17	89.36	85.74	78.69	82.89	94.58	84.35	83.80
전년대비	▽2.76	▽1.53	▲4.03	▲2.99	▽8.48	▽3.08	▽3.18	▽9.27	▲0.38	▽3.65	▽3.41	-	▲1.01

○ 기초 지방공사 세부 평가지표별 안전보건 이행 실태

세부 평가지표	주요 실적 및 진단
재난안전 관리체계 적정성	◦ 대다수 KOSHA-MS 및 ISO-45001 등 글로벌 규격 취득 ◦ 안전보건기본계획 및 이사회 보고 등 외견상 절차 완료 ◦ 중장기 시설 안전 투자 계획의 부재 또는 부실 ◦ 안전 전담부서의 지배적 위상 결여와 전문성 분절
재난안전 역량강화 적정성	◦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의 정량적 성과에 비해 실효성 부족 ◦ 사업장 고유의 고위험 공정 특성이 융합되지 못한 평면적 진행 ◦ 훈련 후 문제점을 복기해 보정하는 P-D-C-A 부재
재난안전관리 활동 및 이행 적정성	◦ 직원 안전사고 평균 재해율 0.30%(전년 평균 0.47%) ◦ 고객 안전사고 평균 발생률 2.62%(전년 평균 2.52%) ◦ 차량사고 발생률 평균 평점 53.21점 : 일반 차량 5.24%, 청소 차량 13.47%, 운수 차량 11.89% 분포

✓ 기초 지방공사의 현행 시스템 한계와 시사점

- ① 형식적 문서 완수와 현장 작동성의 괴리(Decoupling)
 - : 행안부 가이드라인 위반 0건 ↔ 직원·시민 사고 억제력 역부족
 - ⇒ 평가를 위한 행정업무에 기관 임직원의 업무 에너지가 낭비되는 구조
- ② 도급·용역·일용직 등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음영지대 방치
 - : 원청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형식적 규정 적용,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감시와 예산 지원 부족
- ③ 특수 차량(청소 및 운수) 관리 전략의 미비
 - : 특수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방호조치를 기획하지 못해 사고 억제력 부족
- ④ 재정적 안전 예산의 성격적 모호함과 과대평가
 - : 단순 유지보수 관리 예산을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포장,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기능 목적의 ‘안전 전용 재정’ 부족

4

기초 지방공사 안전보건 개선 방향

○ 실행 및 근로자 참여 중심의 위험성평가 완전 개혁

✓ 모바일 TBM 연동형 실시간 위험성평가 제도 구축

- ① 현장의 실제 관리감독자(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 동참
- ② 일일 작업 돌입 전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당일 공정상 위험 인자 확인
- ③ 스스로 보강 조치를 완료했음에 대한 전산 등록

✓ QR코드 활용 등 안전정보 시각화 추진을 통한 상시 공유 및 주지의무 달성

- ①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설비 전반에 전용 QR코드 부착
- ② 작업 전 해당 설비 아차사고, 규정 미준수 징계 등 확인

○ 안전보건 전담 부서의 독립성 강화 및 인센티브 혁신

✓ 비상 작업 중지 선언권 및 현장 개선 명령권 부여

✓ 승진 최저소요연수 단축 및 가점 부여

- 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도 등 시행

✓ 고위 간부 승진 연계 의무 복무제 도입

- 사내 핵심 간부 승진 요건에 안전관리 실무부서 최소 근무 연수 명문화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원·하청 상생 안전 보증

✓ 계약 및 노무 전 분야의 상생 거버넌스 구축

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②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통과제’ 의무화

구분	평가항목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방침·이행계획·역할분담	방침 적정, 계획 수립, 책임 명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허가	자체 평가 이해, 점검·모니터링 교육·기록, 허가 이행
운영관리	신호·연락·설비·비상대책	도급인·수급인 체계, 설비 안전, 대피·피해 대책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 산업재해 현황	재해 이력 점검
안전보건관리비용	시설·장비·보호구 비용	안전조치 비용 반영

③ ‘원·하청 통합 상생 안전보건협의체’ 수립

◦ 기관장이 최소 반기 1회 이상 직접 주관하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청취

④ ‘경제적 직접 지원 예산제’ 운영

◦ 영세 하청 업체의 노후 보호구 교체를 위해 공사가 직접 교체 예산을 무상 보증 하여, 하청 업체의 안전 자생력 정착

○ 스마트 안전 및 기후위기 연동형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수작업 중심의 점검 한계를 AI 및 스마트 예방 기술로 대체

(예시) ‘IoT 무선 센서 안전진단 플랫폼’, ‘AI 통합 관제 CCTV’ 구축 등

○ 실질 안전보건 예산의 강제 분리 및 절차서 제정

✓ 안전보건 예산 심의제 및 계획 수립 절차서 제정

- ① 단순 외벽 청소, 사무실 벽지, 전등 교체, 노후 엘리베이터 일반 유지보수 비용 등 자산 유지 성격의 건축 예산은 재난안전 예산 분류에서 전면 제외
- ②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률 감소 목적 비용만 ‘안전보건 예산’으로 승인
- ③ 연간 예산 내에 강제적 최소 지분 배분 비율을 규정하여 예산의 착시 현상 제거

○ 탑다운(Top-Down) 책임경영과 바텀업(Bottom-UP) 안전문화의 조화

✓ 최고경영자의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안전경영 집행

✓ 아차사고 및 실패 사례 자산화 학습 시스템 운영

■ 참고자료

[간행물]

양성필. (2023). 산업재해 예방의 지름길, 위험성평가제도. 『지방공기업』 가을호 Vol. 23 통권 43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인터넷 자료]

김·장법률사무소. (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Retrieved fr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6593

김·장법률사무소. (2026).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및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Retrieved fr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939

무재해신문. (2025. 12. 18.).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전환 ‘지시·감독’에서 ‘참여·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Retrieved from https://www.mujehe.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4&page=1

서울특별시. (2021. 9. 13.). [보도자료] 서울시, 민간 공사장·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AI·IoT로 사고예방. Retrieved from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346957&cntPerPage=10&curPage=1&srchText=%EC%8A%A4%EB%A7%88%ED%8A%B8%20%EC%95%88%EC%A0%84%EA%B4%80%EB%A6%AC%20%EB%8F%84%EC%9E%85

안전신문. (2026. 6. 24.). 산업현장 AI 스마트 안전기술 어디까지 왔나. Retrieved from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157>

지방공기업평가원. (2026). 2026년도(20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www.erc.re.kr/usr/com/prm/BBSList.do?bbsId=BBSMSTR_000000000387&menuNo=50000000&upperMenuId=5000

행정안전부. (2026. 1. 12.) [보도자료]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Retrieved from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23005

‘G-브리프’의 내용은
과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